

군산 미군부대 성폭행 사건 놓고

미군·경찰 ‘진실게임’

군산에 위치한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놓고 미 공군과 경찰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미 공군 측은 “한국 경찰과 공조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미 공군으로부터 공조 수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미 공군 측의 발언을 일축했다.

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달 24일 오전 9시경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정문으로 A씨(20대·여)가 뛰어나와 “성폭행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군무원이 이를 발견해 A씨를 미 헌병대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전날인 7월 23일 저녁 해당 부대 숙소로 간 것으로 파악됐다.

제8전투비행단 측 공보관은 “히어

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며 “한국 경찰과 함께 조사를 하고 있다.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으면 이를 모두 한국 수사팀에 전달하고, 수사팀에게 답을 받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북경찰청과 군산경찰서는 제8전투비행단으로부터 아무 것도 전달 받은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건 발생 후 일주일여 지난 현재까지 공조 수사 또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가 이 사건을

처음 인지한 것은 미 공군의 연락이 아니라 지난달 30일 지역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된 이후부터”라면서 “사건을 인지한 이후에도 공조 요청 등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 외사계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측과 연락이 닿았

미 공군 “한국 경찰과 공조 수사 중” 경찰 “미 공군에게서 전달 받은 것 없어”

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부대 공보관이 경찰과 공조수사를 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언론을 통해 사건을 인지한 만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초등 입학연령과 관련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사실안전원 앞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과 관련한 답변을 미치고 이동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 만5세 초등 취학 교육부 학제개편안에 ‘한목소리’

“연구·토론 없이 탁상서 졸속 추진”

“학제개편 중차대한 문제… 즉각 철회·국민께 사과해야”

“만 5세 입학이 유아 발달 단계에 적절한 것일까”

전교조 전북지부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초등 입학연령 1살 낮추는 교육부 학제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학제개편안은 아동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학부모들을 위한 것일까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초등 1학년은 지역 돌봄 체계가 아직 자리잡지 않아 부모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고 경력단절이 일어나는 시기다. 오히려 학교

적응에 대한 우려로 사교육 수요가 늘어날수록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전북지부는 “한 사람이 태어나 잘 성장해 주체적 삶을 살아가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은 다양한 연구 및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마련돼야 한다”며 “학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가. 이걸 탁상에서 졸속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박순애 장관은 이

번 만5세 조기취학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담당자 문책 및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한편, 박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초등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고, 중·고교와 대학 입학·졸업 연령도 1년씩 앞당겨 조기에 사회로 진출시키는 학제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1년을 한꺼번에 앞당기면 인력·시설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생일 기준으로 끊어 3개월씩 앞당겨 4년 뒤인 2029년에 완료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장은성기자

전북교총도 만5세 초등 취학 학제개편 ‘반발’

“유아 발달 무시한 경제논리… 사교육 조장”

“학부모·교육계 의견 수렴 없이 발표… 즉각 철회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만5세 초등 취학 학제개편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은 “만5세 초등 취학은 경제논리만 앞세워 유아의 특성과 발달을 무시하는 것으로 오히려 조기 사교육만 조장하고, 유아의 행복권을 박탈할 뿐”이라며 “학부모와 교육계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학제개편 추진에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현재 만~5세 유아는 발달 단계에 따라 놀이 중심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교실 크기와 형태, 화장실과 급식 등 시설 환경도 해당 연령 유아들의 심신 상태를 고려한 것”이라며 “심도 있는 의견조사나 연구 조차 없이 단순히 ‘요즘 애들’을 키워주고 ‘똥떡해졌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이 시기 유아의 경우 1~2개월 차이만 나도 큰 발달 격차를 보이는 현실인데 연령이 다른 유아를 일률적으로 한 교실에 몰아넣은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로 인해 기본생활, 교육관계, 학습에서 만5세 유아의 스트레스가 커지고, 학부모들도 뒤처질 것을 우려해 조기 사교육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현재도 개인 계에 따라 놀이 중심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교실 크기와 형태, 화장실과 급식 등 시설 환경도 해당 연령 유아들의 심신 상태를 고려한 것”이라며 “심도 있는 의견조사나 연구 조차 없이 단순히 ‘요즘 애들’을 키워주고 ‘똥떡해졌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책임한

아울러 “2019년 기준(OECD 교육지표 2021) OECD 38개국 중 26개국의 초등 취학 연령이 우리나라와 같은 만5세이고, 만7세인 국가도 8개국인 반면 만5세는 4개국에 불과하다”면서 “만5세 초등 취학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기종 회장은 “정책기획과정에서부터 학교현장,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학교현장에서 공감하는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생활지도법 마련,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폐지,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기관 등에 대한 복안부터 마련하고, 이를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업무보고를 통해 현행 만 6세인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2025년부터 4년 단계적으로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장은성 기자

도의회, 추경안 원안 가결… 민선8기 일부 공약 반영

10조3248억원 규모 본예산 대비 1조2243억 증액 ‘지방소멸 대응기금 협의체 구성 협의’ 부대의견 첨부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 전주2)는 지난달 29일 최종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10조3248억원 규모 의 제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 의결된 추경예산안은 본 예산 편성 후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물가·고유가 등으로 추가 수요가 발생한 증액사업, 신규사업과 민선8기 일부 공약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본예

산 9조1,005억원 대비 1조2,243억원(13.5%)이 증액됐다.

이번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인구유입 효과 등으로 쟁점이 되었던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대해서는 향후 사업 발굴 시 지방소멸 위기의 문제점과 대안을 잘 알고 있는 지역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과의 협의체 구성과 의회와 사전 협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해 가결됐다.



한편, 진형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2, 사진)은 “제12대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예산심사인데 민생현장 최일선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히어른 시기인 만큼, 이번 추경 예산이 도민들의 생활 안정 회복에 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인사, 그래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장연국 도의원 “고위공무원 인사청문회 확대 고려해달라”

도 차원의 고위공직자 임명에도 인사청문회와 같은 인증 절차가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전북도의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393회 5분 발언을 통해 “도민이 수년 만에 바뀐 지사와 교육감에 큰 기대를 하고 있음에도 인수위 구성 단계부터 ‘코딩인사’, ‘전문성 결여’라는 인사 잡음이 나왔다”며 “그렇게 원치 않는 결과를 지키는 인사와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와 기관장 선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연국 의원은 “현재 전북의 출연



기관 16곳 중 단 5곳만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만, 이마저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며 “더불어 전북 내 2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은 총 7자리로 도민의 동의를 묻는 사례는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교육청의 경우 조직개편이 과거와의 단절에 집중될 가능성

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노력과 자질을 평가하겠다는 서거석 교육감의 소신이 잘 지켜져, 교육감의 인사개입 논란이라는 오명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연국 의원은 “전북의 출연기관장과 고위공무원 임명에, 도민의 공감과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인사청문회와 같은 절차가 더욱 확대된다면, 도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조될 것”이라며 “합의학과 도지사의 의지로 가능한 인사청문회의 확대를 고려해볼 것”을 제안했다. /김경수 기자

오현숙 도의원 “도내 14개 시군 낙하산 인사 즉각 개선해야”

전라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 행정자치위원회, 비례)이 1일 제39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14개 시·군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현숙 의원은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는 우수 지역인재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공무원 개인의 능력발전 및 역량 향상의 기회 제공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그동안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의 인사 순통을 트는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도내 시·군 공무원의 90%가 6급 이하 하위직으로 퇴사하고 있는데, 도청 출신 5급 사무관이



시군 전체 정원의 5%도 못 미치는 5급 자리를 차지해 승진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며, 이는 시·군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근무의욕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단체장 인사 역시 공평적 인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도에서 파견을 나간 대부분의 부단체장 임기는 1년 남짓으로 짧은 근무 주기로 인해 업무 파악과 직원 소통이 어려워 책임감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

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현숙 의원은 “전북도가 시장·군수와 협의를 통해 부단체장 인사를 했다”고 항변하지만 막강한 예산권과 감사권을 지닌 전북도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시장·군수가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오현숙 의원은 “전북도의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는 관선시대의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고 일당 독점의 전북에서 다른 의견을 내지 못하는 폐쇄와 정치적 낙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며 “1:1 원칙에 어긋난 전북도 인력을 즉각 재배치하고 향후 원칙과 합리성에 부합하고 상호 존중적이고 대등한 인사교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선관위, 6·1 지방선거 보전비용 총 164억여원 지급

시·도지사 18억4434여만원, 교육감 33억3612여만원 등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193억7,249여만 원 중 29억5,009여만 원을 감액한 보전비용 164억6,740여만 원을 지난달 29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 제116조제2항에 규정된 선거공명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총 289명으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243명,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미만을 득표하여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46명이다.

선거별 보전비용을 보면 △시·도지사선거(2명) 18억4434여만원, △교육감선거(3명) 33억3,612여만원, △구·시·군장선거(34명) 35억4,820여만원, △지역구·도의회의원선거(32명) 10억8,422여만원, △비례대표·도의회의원선거 2억1,187여만원, △지역구·시·군의회의원선거(218명) 61억9,919만원, △비례대표·시의회의원선거 3억4,337여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35조에 따라 보전비용 지급 후라 할지라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보전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명령에도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반복적으로 징수 위탁을 실시하며, 이 경우 지자체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또한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한다.

전북선관위는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